

「금융규제혁신」 통합 추진회의 말씀자료

1. 인사말씀

- 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입니다.
 -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민간 전문가 여러분, 금융협회 및 금감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- 그간 금융위는 업무계획, 「혁신금융 비전 선포식」 등을 통해
 -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고,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
-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정리하고, 향후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.
 - 그간 행정지도 정비방향을 확정하는데 적극 기여해주신 장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ombudsman 위원님들과,
 - 규제혁신을 위한 여러 논의과정에서 과제발굴과 건설적 의견개진에 힘써주고 계신 금감원과 협회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2. 그간 경과

- ‘혁신성장’은 새로운 기술·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을 찾는 성장전략으로서, 민간의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조장해야만 달성 가능합니다.
 - 반면에 규제는 그 속성상 자유로운 영업을 제한해 혁신적 시도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, ‘혁신성장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‘규제혁신’과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.

□ '규제혁신'을 위해서는 '규제 패러다임'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창업과 혁신적인 시도를 저해하는 낡은 칸막이·포지티브 규제 체계 등을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특히, 본질적으로 '규제산업'인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규제개혁 프레임이 요구됩니다.

- 금융규제는 금융회사의 자금중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, 신용배분 및 금융산업 경쟁력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

□ 이러한 인식아래, 그간 정부는 금융이 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新성장분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.

① 「인터넷전문은행법」과 「금융혁신지원법」 제정을 통해

- 금융업에 경쟁과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혁신적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

② 이와 연계하여, 규제가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핀테크·빅데이터 등 新산업 분야에서 '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'에 우선 착수하였습니다.

③ 자칫 숨은 규제가 될 수 있는 '행정지도'의 투명성·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.

-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개정을 통해 행정지도 연장제한(1회), 명시적 규제로 전환검토 등*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

* 그 외 행정지도 사전심의회 구성, 행정지도 실태평가 강화 등 포함('19.1.25일)

-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, 금융위원회 「음부즈만」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.

3. 규제혁신 추진원칙

□ 현재 추진 중인 규제혁신은 단순한 규제완화와는 다릅니다.

- 또한,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규제정비와도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.

➡ 정부는 이전 규제정책과 차별화하여, '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규제혁신'을 위한 3가지 추진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.

❶ 먼저,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·개선하도록 '규제입증책임을 전환'하고자 합니다.

- 보수적·관행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거나 혹은 규제로 얽여진 이해관계에 함몰되기 쉬운 관료의 시각이 아닌,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.

❷ 또한,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경우라도, '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'으로 규제체계를 전향하겠습니다.

- 요건을 나열하는 경직적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분류, 포괄적 정의를 통해 보다 혁신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.

❸ 마지막으로,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규제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'거버넌스'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혁신의 키를 쥌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, 전문가 중심의 추진체계를 활용하겠습니다.

4. 향후 추진전략

□ 이러한 큰 원칙을 토대로,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이겠습니다.

○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점검 및 핀테크 분야 낡은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,

- 추가로 법령·고시 등 명시적 규제,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개선에도 착수하여, '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'를 해소*하겠습니다.

* 명시적 규제(법령·고시) + 비명시적 규제(행정지도·모범규준) 영역 전반 포섭

○ 규제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층적 추진체계는 유지하되, 종합적·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.

□ 구체적으로, 총 1,100여건*에 달하는 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를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.

* 명시적 규제(789건) + 비명시적 규제(행정지도 39건 + 모범규준 282건)

① 우선, 행정지도는 '옴부즈만' 점검이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, 이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착수하겠습니다.

- 총 39건 행정지도 중 금융소비자 보호, 금융안정 등을 위해 시급한 사항이 아닌 30건(약 77%)에 대해서는 법제화 등을 거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특히, 투자일임업 모범규준, 금융회사 전산장비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법규 근거없이 영업·경영활동 등을 규제하는 행정지도는 유효기간 만료 즉시 폐지할 것입니다.

-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(9건)에 대해서도 존치 또는 법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.

② 핀테크 분야에서는,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안착 등과 연계하여,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·추진하겠습니다.(2분기)

- 특히, 핀테크기업 투자제약, 금융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논의하여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③ 법령·고시 등 **명시적 규제**의 경우, 부처별로 구성된 ‘기존규제 정비위원회’를 통해 전수조사·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- 오늘 금융위 ‘기존규제정비위원회’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과제 재검토를 시작으로,
- 5월 중 보험분야, 하반기 중 자본시장분야 등 내년까지 총 789건 등록규제를 차례로 점검·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④ 280여개에 달하는 금융협회 **모범규준·가이드라인** 뒤에 숨어 있는 규제적 요소도 꼼꼼히 찾아 바로잡겠습니다.

- 특히, 상품·자산운용 분야 등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창설된 규제요소, 경영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·개선*토록 유도하겠습니다.

* (예) ①법규 근거없이 영업활동 제한(업무처리 모범규준, 리스크관리 모범규준),
②경직적 업무기준(고객 고지수단으로 SNS 불허, 지점설치·운영기준) 등

5. 맺음말씀

-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수많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, 폐지·개선에 따른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특성이 있습니다.
-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인내심있는 소통과 협의, 모범사례 창출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.
-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규제혁신의 주체인 만큼,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-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, 지지기반 확보 등으로 규제혁신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.

□ 한편, 규제가 외형상 제도적으로는 폐지되더라도
규제 당국이나 수범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,
혁신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고
유사한 규제가 다시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.

- 이번 규제혁신 노력이 일회성 제도개선으로 끝나지 않고
인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
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
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.

□ 앞으로 정부도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

- 검사·제재 선진화, 면책규정 정비 등 ‘금융감독 혁신방안’
마련(2분기)을 통해 ‘혁신금융’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
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